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관세청 "가상화폐 활용한 무역금융범죄·외환거래 감시"

최근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과 외환 송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거래 감시에 나선다.

관세청 관계자는 21일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산 빼돌리거나 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에 가상화폐가 활용될 수 있어, 관세청이 이러한 동향을 감시해 혐의를 포착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정부의 합동단속과는 별개로 가상화폐 거래 감시를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금융범죄와 불법 외환거래 감시 업무의 연장선에서 불법 가상화폐 거래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납세자 권익 신중하… 지난해 부당한 세무조사 46건 시정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 46건에서 부당하게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것을 자체 시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한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33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66건을 재심의한 결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총 13건을 바로잡았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부당한 권익침해를 막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1명의 국세청 관계자를 제외하고 위원장 등 위원을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국세청, 세

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권리보호요청을 재심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발견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소관부서에 개선할 것을 통보하는 등 국제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갖추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 25명 내외… 발표는 내달 중순

국세청이 내달 중순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된 '2021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승진 규모는 25명 내외이다.

특별승진 규모는 승진 TO의 15%인 3~4명이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우수한 직원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직원을 선정한다.

최근 국세청 서기관 승진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8명·하반기 27명, 올해 상반기 25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이다.

서기관 TO는 명예퇴직 대상자 수에 영향을 받으며, 명예퇴직 대상인 1963년생 서기관이 1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작다고만 할 수는 없다.